

나주 이전 앞둔 한전 조직 쪼개 5만 오나

정부, 전체 인력의 40%인 판매부문 분리 방침

노조 잇단 반발 속 전기료 인상 우려도

정부가 한국전력 인력의 40%를 차지하는 판매부문을 분리해 민영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한전이 쪼개지면 '속빈 강정'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력노조도 한전 부실화와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일 한전과 전국전력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근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 재통합보다는 발전부문의 경쟁을 더욱 확대하고 판매부문을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력산업 정책방향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발전-송-배전-판매'로 이어지는 전력산업 구조에서 발전부문을 분리한 데 이어 판매부문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전에서 차지하는 판매부문의 비중이 40%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광주·전남혁신도시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꼽히는 공기업이

다. 외형적으로 예산이 29조5482억 원에 이르고, 본사 근무인원만 1425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유지를 위해 가장 큰 공을 들였다.

혁신도시에는 한전 자회사인 한전 KDN·한전KPS와 전력거래소도 이전하게 된다. 여기에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들도 함께 내려올 것으로 보여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이 가능해진다는 기대다.

하지만 한전의 40%를 차지하는 판매부문이 분리되면 한전의 혁신도시 이전은 '속빈 강정'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인력을 보면 본사 근무인원 1425명 중 600명 가량이 판매부문 근무자여서 나주로 이전할 인원은 800여명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600명 가량이 내려오지 않고 가족까지 합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세수 차질도 불가피하다. 200억원 정도로 추산된 한전과 한전KDN·한전KPS 등 3개 기관의 지방세 납부액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인원 축소에

따른 지방교부세·주민세 등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전력 판매 경쟁이 도입되면 현행보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판매 경쟁은 전기요금 현실화와 전압별 요금제가 전제될 수밖에 없어 현재보다 10%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측된다는 것이다.

윤종해 전력노조 광주·전남지부 위원장은 "판매부문 분리는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판매부문이 빠지면 이와 관련된 자회사나 유관기업의 유지도 어렵게 돼 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의 차질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전력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력사업 정책은 해박사 되면 좋고 안되면 할 수 없는 벤처사업이 아니다"며 "판매 경쟁을 철회하고 발전부문 재통합과 공공성 강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발전노조도 이날 "전기 민영화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사태처럼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한 뒤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발전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어르신들의 피서지 금남로 4가역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광주도시철도 1호선 금남로 4가역 '민남의 장소'에 장기·비둘기를 두거나 공연을 즐기려는 노인들과 시민들이 몰려들면서 도심속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이대통령 “지방공기업 대대적 개혁하라”

광주·전남 구조조정 폭 커질 듯

광주시가 지방 공기업 등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효율성 제고 등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 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게 되고, 그 폭도 커질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지방재정 약

화 문제와 관련,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기준과 수준에 맞춰 컨설팅하는 개념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앙 공기업은 타이프하게 개혁하고 있다. 지방공기

업도 일제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환경시설공단·도시철도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광주시 산하 공기업 4곳 등을 포함해 전국 16개 광역시도 산하의 각종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해 조만간 감사와 구조조정 작업이 시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사업에 대해 “은행 지점 내듯 좋은 사무실, 거창한 사무실을 만들려니(지점 개설이) 더디고 시민의 접근이 어렵다”면서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점을 개설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99억2천만원 가량 대출됐는데 향후 10년 안에 2조원이 서민금융으로 활용되려면 연간(대출규모가) 2000억원은 돼야 한다”며 “1200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수준이면 아직 시민이 체감하는데 부족하다.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옛 도청별관 5월단체 등 의견수렴 설계변경안 이달말 최종발표

옛 전남도청 별관 부분 보존을 전제로 한 설계변경안 5·18 단체와 시민대책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최종 발표될 예정이

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옛 도청 별관을 어디까지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 주 안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에초 추진단은 21일 별관 연장 50m 중 24m를 철거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설계변경안을 내용을 방침이었으나, 지역 내 일부 반발을 우려,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됐다.

추진단 관계자는 “부분 보존키로 합의한 결과에 따라 도청별관 보존방안 마련을 위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사실상 보존이 어려운 최

하 등급인 E급(불량) 판정을 받았으나 합의정신을 존중해 전당 전체 기능 및 5·18사적지가 갖는 상징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다음주까지 문화전당설계자문위원회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 5·18 단체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靑 비서관 호남인 딱 1명 뽑았다

15명 영남은 7명...계속되는 호남홀대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 이어 단행된 비서관급 후속 인사에서도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은 홀대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신설된 국민소통비서관에 박명환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인사운영팀장, 정책홍보비서관에 박홍신 청와대 언론비서관,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이상휘 춘추관장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신임 비서관 15명을 내정했다. 그러나 신임 비서관 15명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함평 출신의 이기권 고용노동부비서관에 단 1명에 불과한 반면, 영남 출신은 7명에 이르렀다.

특히, 이 비서관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민심과의 소통 등 보기확비서관에는 이상휘 춘추관장을 내정하는 등 청와대 신임 비서관 15명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이번 주 내에 일부 비서관 인사를 추가로 단행하는데 이어

행정관 인사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일부 비서관에 대한 신원조회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인선이 마무리된 15명을 먼저 발표했다”고 말했다.

◇신임 비서관 내정자 명단(괄호안은 전직과 출신)
▲정책홍보비서관 박홍신(언론비서관, 충남) ▲정무1비서관 김연경(특임장관실 특임실장, 경북) ▲정무2비서관 이재환(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구) ▲공직기강비서관 장석명(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대구) ▲국민권익비서관 이상목(민원제도개선비서관, 서울) ▲국민소통비서관 박명환(인사비서관실 인사운영팀장, 경남) ▲시민사회비서관 이상권(코트라 감사, 경남) ▲외교비서관 이혁(일본대사관 공사, 경북) ▲홍보기획비서관 이상휘(춘추관장, 경북) ▲뉴미디어비서관 김철균(뉴미디어 홍보비서관, 서울) ▲춘추관장 박정환(춘추관장실 선임행정관, 충북) ▲고용노동부 비서관 이기권(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장, 전남)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운영팀장 박명환(문화체육관광비서관, 서울) ▲관광진흥비서관 안경모(한국관광공사 부사장, 강원) ▲녹색성장 환경비서관 김성협(미래비전비서관, 서울)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